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의 이중성: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이준용**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통일 정책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여론의 분화 현상을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현상으로 보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통일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원칙적인 수준에서 통일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압도적 다수를 보이지만, [연구문제실제로 통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치 지식, 정치 이념, 권위주의적 성격,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공변량 구조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했다. 또한 의견의 괴리를 가장 많이 보이는 시민이 누구지 확인하기 위해 위의 변수들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이 의견 괴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600명의 성인남녀로 구성된 표본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는 정치적 지식과 다른 변수들 특히 정치 이념과 권위주의적 성격, 그리고 해석적 프레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통일에 대한 여론의 '원칙과 정책의 괴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키워드 : 화해협력 정책, 김대중 정부, 통일 정책, 해석적 프레임, 권위주의 성격

* 조교에 대해 귀중한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기금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 jwrhee@snu.ac.kr

1. 문제 제기: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현상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적 사안으로서 남북 교류, 대북 지원, 통일비용 지불 등과 같은 일련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이슈를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여론은 남북한 교류, 북한에 대한 지원, 통일비용 지불 등과 같은 통일정책에 대해서 찬반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전형적인 갈등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양상은 지난 김대중부가 제시하고 적극 추진했던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 더욱 극심하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여론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양상에서 다음과 같은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통일이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여론이 전반적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대한 여론은 극심한 분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9년 12월 한국방송과 미디어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3%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찬성한 반면 22%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고, 통일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경우는 5% 불과 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남북교류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금강산 관광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약간 넘는 54%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을 뿐, 나머지 46%는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마찬가지로 2002년 리서치앤리서치가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통일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82%였지만 당시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른 식량지원과 비료지원에 대한 찬성은 13%, 경수로지원에 대한 찬성은 10%에 그쳤다.

이러한 여론 현상은 스나이더만과 그의 동료들(Sniderman, Brody, & Tetlock, 1991)이 지적했던 '원칙과 정책에 대한 여론의 괴리 현상(the principle-policy puzzle)'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통일에 대한 여론을 보면 원칙적인 수준에서 통일에 찬성하는 응답이 압도적인 다수를 보이며, 이것만 보면 통일에 대해 동의하는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 즉 우리 국민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남북통일을 원하고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갖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통일 정책에 대한 각론으로 들어가서 경제교류, 문화교류, 스포츠교류와 같은 남북교류 정책이나 관광사업, 식량지원, 비료지원, 경수로지원 등과 같은 북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대립되는 의견분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갈등적 이슈에 대한 여론형성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통일 원칙과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의 괴리현상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일견 복잡하게 보이는 통일 원칙과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의 괴리현상은 결국 개인의 정치적 의견형성 또는 표명과정에 작용하는 정치적 이념과 정치지식의 역할, 그리고 권위주의적 성격과 같은 개인차 요인의 영향력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근거와 이론적 논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원칙과 정책에 대한 여론의 괴리현상은 여러 정치적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가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공산주의자의 발언권을 용인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McClosky, 1964). 또한 이른바 상징적 인종주의(symbolic racism)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고전적인 인종주의에 반대하고 시민적 평등권을 지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적 선택에서 인종적 편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Kinder & Sears, 1981; McConahay, 1982).

일견 이러한 원칙과 정책에 대한 여론의 괴리현상은 가치와 의견의 모순 또는 불일치로 보인다. 그런데 스나이더만 등(Sniderman et al., 1991)은 이 현상을 모순이나 불일치가 아닌 정치적 태도가 형성되는 하나의 ‘합리적인 의견 구성 방식’으로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여론의 괴리현상은 정치지식에 따라 정치적 이념과 감정이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인한다고 한다. 이는 곧 정치적 지식이 서로 변별되고 통합된 정도에 따라 원칙과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를 결정하는데 이념과 감정이 개입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지식이 덜 발전된 시민은 정치적 이념과 원칙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지지여부의 연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면서 동시에 특정 사회적 집단에 대한 감정이 원칙과 정책에 대한 지지를 주로 결정한다고 한다. 반면, 정치적 지식이 발전되어 이념, 가치, 의견, 감정요소 등이 분화되면서 동시에 통합적인 경우에는 정치적 이념과 감정요소를 모두 동원해서 원칙에 대해서 찬성하면서도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통일 원칙과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의 괴리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스나이더만과 그의 동료들이 지적한 정치지식과 정치적 이념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구하려 한다. 동시에 이러한 원칙과 정책의 괴리현상이 정치적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면 동시에 개인의 성격요인의 영향도 받을 것이라 가정하고, 정치적 태도와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으로 알려진 권위주의적 성격(authoritarian personality)을 설명 변수로 제안한다. 여기에 덧붙여, 통일을 무엇과 연관지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통일이라는 원칙과 일련의 통일 정책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통일에 대한 원칙과 정책의 불일치가 강조되거나 약화되어 나타난다는 가정 하에 통일을 이해하는 해석적 틀(interpretive frame)을 이용해서 원칙과 정책의 괴리현상을 탐구하려 한다.

2. 통일 여론의 괴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모형화

먼저 '이른바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구하려 한다. 스나이더만과 그의 동료들은 주로 정치적 이념과 정치적 지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를 설명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와 더불어 권위주의적 성격,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연구모형을 제시하려 한다.

1) 정치적 이념

정치 이념은 흔히 정치적 의견형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일에 대한 의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정치 이념은 정치적 신념과 지식의 구성,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정보처리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nverse, 1964; Tetlock, 1989; 종합적 리뷰는 Kinder & Sears, 1985). 일부 학자들은 특히 정치 이념의 기능적 특성에 주목해서, 정치 이념이 일종의 정치적 도식(schema)으로서 작용함으로써 개인이 복잡한 정치적 사건이나 이슈를 의미있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분류하고, 기존 신념에 통합하도록 돕는다고 주장했다(Conover & Feldman, 1986; Hamill, Lodge, & Blake, 1985; Lodge & Hamill, 1986). 복잡한 정보가 난무하는 정치적 환경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념을 근거로 정치인이나 사안의 보수성과 진보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효율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내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어떤 정치인이 진보적인지 아니면 보수적인지, 어떤 사안이 진보적 함축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보수적 함축을 담고 있는지, 어떤 정책이 진보적 입장을 대변하는지 아니면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작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판단은 정치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특정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특정 사안이 중요한지, 특정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지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 이념은 정치적 정보처리를 원활하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능적인 구조화된 지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 공중의 정치적 이념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002년 2월 1일 <중앙일보>가 한국정당학회와 공동기획해서 발표한 '의원노선 대해부', 2002년 5월 1일에 발표된 <조선일보>와 한국조사연구학회 공동기획에 의한 '한국인의 이념성향', 그리고 2002년 6월 3일 <한겨레>가 사회과학센터와 공동기획해서 발표한 '한국인의 이념성향' 등

이 바로 그것이다.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한국 공중의 이념성향은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강력한 이념의 구성요소가 바로 통일, 안보, 대북 정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태도이다. 진보적 입장은 안보보다는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교류와 화해적인 통일정책을 지지하며, 미국에 대해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을 대변한다. 보수적 입장은 이와 반대되는 가치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 안보, 대북 정책과 관련된 진보-보수 이념은 구체적인 사안, 예컨대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같은 사안에 대해 극단적인 대립을 보인다. 이러한 통일, 안보, 대북 정책과 관련한 이념은 다른 정치적 가치들은 물론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가치차원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정치적 이념이 통일 및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의견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이준웅, 2004). 통일 및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은 복잡한 이념적 함축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정치적 이념이 준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성향을 지닌 시민은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또한 일련의 통일 정책, 특히 김대중 정부이후 추진되고 있는 남북 화해 협력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지니는 반면, 보수적 성향을 지닌 시민은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 정치적 지식

지식은 정보처리의 조건이며, 과정이며, 동시에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속성은 정치적 영역에 적용되어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정치적 지식은 특히 의견형성과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정보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여론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데 정치적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지식의 발전정도에 따라 정치적 정보처리 능력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정치적 정보처리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 지식이 많은 사람은 정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Fiske & Taylor, 1991; Lau, 1986; Luskin, 1987), 복잡한 정치적 이슈의 배경과 맥락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Conover & Feldman, 1984; Converse & Marcus, 1979; Judd, Milburn, & Krosnick, 1981), 적은 정보로부터 더 많은 의미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한다(Graber, 1988; Newman, Just & Crigler, 1992).

정치 지식의 이론적 중요성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식을 구성개념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다. 먼저 정치적 지식의 어떤 속성과 차원을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자간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해도 측정된 정치적 지식의 이론적 토대에 대해 일치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Kinder & Sears, 1985; Kuklinski, Luskin, & Bolland, 1991). 정치 지식은 정치 스키마(political schema), 정치적 전문성(political expertise),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정치적 지식의 발전이 지식 구조화 정도의 고도화를 의미하며, 이 구조화의 정도가 곧 정치적 정보처리 방식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설명하는 요인이라는 점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 인지론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지식의 실체는 개인의 장기기억 내에 의미적으로 연결된 연결망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 지식의 발전 정도에 따라 구성의 복잡성과 효율성이 심화된다고 개념화할 수 있다(Hastie, 1986; Terlock, 1989).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정치적 지식의 발전은 지식의 변별성(differentiation)과 통합성(integration)이 함께 고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능적으로 정치적 판단과정에서 인지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며 동시에 변별적으로 활용하는 성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주목한다. 정치적 지식이 발전된 시민은 상호관련된 가치, 신념, 태도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동시에 이러한 차이성이 중복되고 얽힌 가치체계나 신념체계를 지녔으며(즉 변별성

이 높으며)(Tetlock, 1981), 동시에 구분된 가치, 신념, 태도간의 상호연계성도 상대적으로 높다(즉 통합성이 높다)고 한다(Feldman, 1989; Judd & Krosnick, 1989). 정치적 지식이 발전된 시민은 다원적인 가치체계를 지녔지만 동시에 이러한 다원적 가치체계의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Tetlock, Hannum, & Micheletti, 1984).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근거로 정치적 지식이 발전된 시민은 어떤 사안에 대해 극단적인 찬성 또는 반대의 태도를 지니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표하며, 독단적인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사안에 대해 좌고우면하는 판단유형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Tetlock, 1984). 이러한 정치 지식의 특성은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스나이더만 등(Sniderman et al., 1991, pp. 58~69)이 지적했듯이, 정치 지식이 발전된 시민은 먼저 갈등적 이슈에 대해 원칙에 대한 의견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분할 수 있다. 즉, 가치와 태도간의 변별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이들은 이러한 구분된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상태를 정치적 이념이나 정치적 감정 등을 동원해서 통합적으로 유지할 능력도 있다.

이러한 설명을 통일여론의 원칙과 정책에 대한 괴리현상에 적용시키면, 정치 지식이 발전한 시민들은 통일 원칙에 대한 의견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분해서 태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이념에 따라 이러한 통일 원칙과 대북 정책에 대한 구분을 통합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수적 정치이념을 지니고 정치 지식이 발전된 시민은 통일이라는 대원칙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동시에 보수이념에 의존해서 일련의 통일 정책에 대해 반대하며(높은 변별성),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감정이나 거리감도 이러한 원칙과 정책의 괴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높은 통합성). 반면 진보적이면서 정치지식이 많은 시민은 진보적인 이념에 근거해서 원칙과 정책에 대한 지지를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게 표명할 것이다(높은 통합성). 그러나 정치 지식의 수준이 낮은 시민은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며(낮은 변별성),

정치 이념과 북한주민에 대한 감정 등이 원칙과 정책에 대해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낮은 통합성) 예상할 수 있다.

3) 권위주의 성격

통일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개인차 관련 변수 가운데, 성격과 관련한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개인의 성격은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 중 정치적인 이슈, 특히 안보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의 형성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격 요소로 '권위주의적 성격(authoritarian personality)'을 들 수 있다. 원래 파시즘과 반유대주의의 심리적 근거를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권위주의 성격'은 권위에 맹종하고 약자를 억압하며, 동시에 아무리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관습을 따르는 성향을 지칭한다(Adorno, Frenkel-Brunswik, Levinson, & Sanford, 1950). 아도르노 등은 '권위주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일련의 정신역동학적 가정에 근거해서 설명했다. 아도르노 등의 주장에 따르면, 권위주의 성격은 주로 강압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양육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압적 양육과정을 거친 개인은 억압된 분노(권위에 대한 분노)와 죄의식을 외부의 권력으로 투사(projection)하고, 분노와 죄의식에서 비롯된 폭력성을 외부의 사회적 약자에게 전위(displacement)하고, 특히 이러한 권위추종과 폭력행사에 대한 동기를 합리화(rationalization)함으로써 자아를 방어한다고 한다. 그 결과, 강압적 양육과정을 거친 개인은 예상되는 외적 위협에 대한 '무의식적 자기방어 메커니즘'을 통해 외부적 권위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은 자기방어 메커니즘에 따라 외부의 위협요인에 대해 무의식적인 적개심을 표출하는데, 이 경우 그 적개심은 '안전하게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에 따라 아도르노 등(Adorno et al., 1950)의 연구결과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인종중심주의와 소수민족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는 개인차 요소라는 것을 제시한다.

아도르노 등의 최초의 연구를 비롯한 후속연구들은 수많은 이론적, 방법론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그들이 개발한 권위주의 성격 척도, 혹은 에프(파시스트 경향성) 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의심하는 일련의 비판으로 인해 완전히 공중분해될 지경이 되었다. 이론적으로도 권위주의 성격이 '무의식적 자기방어 메커니즘'의 작동결과로 형성된다는 정신역동학적 설명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등장했다. 결국 '무의식적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란 개념 자체가 이론적으로 유지되지 어려울 정도로 이론적으로 공격받게 되면서, 권위주의 성격 연구 자체가 연구주제로서 성립되지 못할 정도로 퇴조했다(Smith, 1997).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권위주의 성격' 개념을 연구주제로 되살린 연구자가 곧 알트마이어(Altemeyer, 1981)이다. 그는 권위주의 성격을 정신역동학적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대신 사회학습이론의 틀을 제시했다. 억압적인 양육환경과 가혹한 규율에 의한 교육이 사회적 학습과정을 통해 추종해야 할 규범으로 내면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에 따라, 알트마이어는 아도르노 등이 제시했던 정신역동학적 설명의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권위주의적 성격을 약자에 대한 공격성, 권위에 대한 추종, 그리고 비합리적 사회규범의 무비판적 수용을 중심으로 재개념화했다. 그는 또한 아도르노 등이 개발했던 에프 척도를 개선해서 방법론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우익 권위주의(Right Wing Authoritarian) 척도를 개발했다(Altemeyer, 1981; Stone, 1983).

이 연구는 권위주의 성격이 통일 및 대북 정책과 관련한 의견형성을 설명하기 위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개념이 '위협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Altemeyer, 1988). 통일 및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슈는 개인과 공동체의 안보와 복지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권위주의 성격을 가진 시민은 일단 통일 및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권위주의 성격 그 자체가 경험적으로 정치적 보수주의와 관련을 보인다는 연구가 많이 있다(McFarlan, Agayev, & Ablakina, 1993; Ray, 1973, 1990).

이러한 상관관계는 사실 권위주의 성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보수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시했듯이 통일 문제는 이념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성격은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정치적 보수주의를 경과해서 연관을 맺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권위주의 성격의 이러한 이념적 특징은 이전에 대한 비관용적인 태도와 결합되어 더욱 강력하게 이념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성격을 지닌 개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성을 표출하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처벌적인 태도를 가지며 동시에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이들을 돕는 것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 발견된 바 있다(Peterson, Doty, & Winter, 1993). 그런데 북한 주민은 한반도에서 최악의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 공중의 고정관념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이준웅, 2000; 정기선, 1997). 따라서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시민은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지니며 동시에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서 북한 주민에 도움을 주는 일련의 정책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알트마이어의 우익 권위주의 성격 척도를 한국적 현실에 맞게 필요한 변용을 가한 척도를 이용해서 권위주의 성격을 측정하려 한다. 그리고 권위주의 성격이 정치 이념 및 정치지식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통일에 대한 의견과 통일 정책에 대한 의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4) 북한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통일원칙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감은 일종의 태도 척도로서, 특정한 집단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개념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집단의 구성원이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 심리적으로 멀게 느낀다면 외집단과 상호이해를 추구하기 위한 의사소통도 줄고 그 집단에 대한 심리적 연대감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개인은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예상은 일부 검증된 바 있다(이준웅, 2000, 2004).

보가더스(Bogardus, 1952)가 제안한 사회거리척도(the social distance scale)는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는 보가더스가 최초로 개발한 이후, 인종, 직업, 계층, 출신지역 등이 다른 집단간의 태도에 대한 연구에 많이 사용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남한 지역간의 '지역감정'에 근거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바 있다(김혜숙, 1988). 특히 정기선(1997)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 대해 갖는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데 적용해서, 남한 주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보가더스의 사회거리척도를 이용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고, 이 변수가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과 관련이 있는지 탐구할 것이다.

5)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

통일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들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이른바 화해협력정책 또는 햇볕정책은 통일지향적 평화 공존을 목표를 두고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정부가 안보 위주의 수세적인 '평화 지키기 전략'을 사용한 것에서 탈피해서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기에 화해협력 통일정책 자체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북한의 잠수정 침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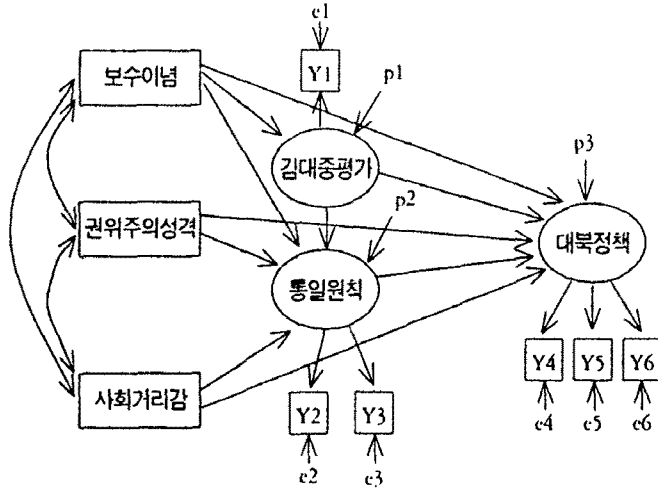
서해교전과 같은 위기가 재발되는 상황에서 화해협력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복합한 의견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바로 화해협력정책의 실질적이 주창자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미치는 영향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변수를 중개변수로 포함해서 통일 여론 설명을 위한 모형을 구성하려 한다.

6)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현상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이상에서 언급한 다섯 개의 독립변수를 포함해서 통일원칙과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괴리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해 보았다. <그림 1>은 구조방정식 모형(a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도시한 것으로서 두 개의 문항으로 측정된 통일에 대한 태도와 대북지원, 남북교류, 통일비용 지불의사 등 세 개의 문항으로 측정된 통일정책에 대한 태도를 정치이념, 정치지식, 권위주의성격, 북한에 대한 거리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정치 지식은 연구모형에 직접 변수로서 투입되지 않고, 조건 변수로 사용된다. 즉 표본을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서 <그림 1>의 모형을 각각의 집단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정치 지식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치적 이념, 권위주의 성격, 북한 주민에 대한 거리감 등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경향, 이른바 효과의 패턴을 탐색하려 한다. 이는 스나이더만 등(Sniderman et al., 1991)이 시도했었던 분석전략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모형을 근거로, 향후 분석은 (1) 아래 모형이 전체 표본에 대해서 적합성을 지니는가를 먼저 확인한 후, (2) 아래 모형에서 확인된 경로계수들이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토하고, (3) 만약 그렇다면 그 차이의 패턴은 어떠한지 점검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다.

<그림 1>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현상: 구조방정식 모형



3. 원칙과 정책의 괴리 현상에 있어서의 해석적 프레임의 역할

통일 그리고 대북 정책은 그 자체로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며, 개인들의 다양한 경험, 신념, 그리고 이념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복잡한 개념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통일 또는 대북 정책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생각들과 관련해서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각 개인에게 있어서 '통일'이 의미하는 바는 각 개인이 지닌 경험, 그리고 그가 지닌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신념과 지식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이 지닌 '통일'에 대한 신념과 지식이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의미적 연결 망을 이루고 있는 다의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지식 구성체(knowledge constructs)를 가정할 수 있다 (Fiske & Talyor, 1991). 그리고 이러한 지식 구성체의 내용적 특성에 따라, 즉 지식 구성체가 어떤 내용의 신념이나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통일을 민족 대단결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며, 다른 이는 훼손된 주권의 회

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듯 지식 구성체의 구성방식에 따라 한 이슈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또는 관점이 달라지는 현상을 '해석적 틀(interpretive frame)의 변화'라고 개념화한다.

'해석적 틀'이란 통일과 같이 복잡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 확인해 주며, 그 개념과 관련된 개인적 기대, 판단, 설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의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Neuman et al., 1993; Rhee, 1997; Sniderman et al., 1991). 이러한 해석적 틀은 통일과 같이 복잡한 대상에 대한 사고를 할 때 효과적으로 이용되는데, 그 주요한 기능은 통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의미를 표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거나, 통일과 관련된 개인적 판단을 내리거나, 또는 통일과 관련된 대상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효과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이다.

이 연구는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갖는 해석적 틀은 기본적으로 다음 몇 가지 중 하나일 것으로 가정한다. 먼저 통일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1) 통일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민족끼리 운명을 같이하는 통합'합으로 이해하는 민족주의적 시각과, (2) 통일을 남한이 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보면서 국가와 민족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득이 되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본 경제적 이해관계 시각, (3) 통일을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는 영토의 일부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이념적이며 체제통합적인 시각으로 대별할 수 있다(이준웅, 2000, 2004).

통일을 바라보는 해석적 틀은 통일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된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해석적 프레임'은 태도의 형성(Nelson & Oxley, 1999), 정치적 판단 전략(Shah, Domke, & Wakman, 1996), 사회적 책임의 귀인(Iyengar, 1992) 등과 같은 일련의 후속적인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 연구는 통일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은 통일에 관련된 개인의 기대와 판단에 사용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태도를 형성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통일 여론의

원칙과 정책의 괴리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해석적 틀의 역할은 이 변수가 정치적 지식과 결합해서 원칙과 정책의 괴리현상에 대해 갖는 상호작용 효과이다. 즉, 이 연구는 해석적 틀은 일종의 지식 구성체로서 정치적 지식이 발전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 동일 원칙에 대한 의견이나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일 다를 것이라고 본다. 비록 그 상호작용 효과의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치적 지식의 고저에 따라 그리고 해석적 틀에 따라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현상이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상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과 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의 차이를 구해 이를 종속변수로 삼고, 이에 대한 해석적 틀과 정치적 지식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려 한다.

4. 연구 방법과 주요 변수의 측정

1) 표집

자료수입을 위해 2002년 6월 서울에 거주하는 6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 기준 할당표집 방법으로 표집했다. 면접에 응한 참여자 600명 가운데 남자가 49.5%였으며, 여자는 50.5%였다. 또한 연령별로 보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20대가 25.7%, 30대가 26.3%, 40대가 20.0%, 그리고 50대 이상이 28.0%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모두 0에서 100까지의 분포를 갖도록 재조정했다.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신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정치적 이념, 정치지식, 반권위주의 성향

정치적 이념의 구성은 일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문항을 통해 측정

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통일과 대북 정책관련한 신념과 태도는 흔히 한국 공중의 이념성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통일과 대북 정책관련 문항을 포함해서 정치 이념을 구성한 후, 이를 연구모형에 투입하면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신념이 포함된 정치 이념 변수를 구성해서 이 변수를 이용해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면, 이는 정치적 이념이 그것의 구성부분인 통일과 대북 정책관련 의견을 예측한다는 전체와 부분의 상관관계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이념 변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통일과 대북 정책 관련 신념을 배제시킨 종합척도를 이용함으로써, 전체로서 부분을 설명하는 오류를 피하고자 했다.

정치적 이념(보수주의)은 '경제성장과 분배', '안보문제와 미국', '예술활동의 자유',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자 파업', '사형제도 찬반', '진보-보수 자기평가' 등과 같은 7문항을 이용해서 측정했다. 측정된 변인의 신뢰도는 .34로 비교적 낮았지만, 다른 정치적 의견들(김대중 대통령 업무평가, 김정일 신뢰, 후보지지 등)을 측정한 변수들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정치 이념 변수의 공변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문항의 평균값은 100점 만점에 52점, 표준편차는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지식은 정치일반에 대한 지식이면서 동시에 통일에 대한 영역 내 지식(specific knowledge)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 국무총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와 같은 정치 일반에 대한 문항 5개, 그리고 '북한 김정일의 공식 직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와 같은 북한 관련 문항 5개를 이용해, 총 10개 문항에 대한 점수를 매겨 정치지식 변수의 값으로 삼았다. 정치일반에 대한 지식과 북한 관련 지식의 상관관계는 .18($p < .001$, $n=6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영역 중심적인 사실에 대한 재인(factual recognition) 기법을 사용했는데,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정치적 사실에 대한 재인은 복잡한 이론적 가정이 최소화된 타당도가 높은 측정방법이며(Luskin, 1987), 정치적 학습, 인지적 복잡성 등과 상관관계를 갖는 등 예측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Rhee & Cappella, 1997).

권위주의적 성향은 알트마이어(1996)의 우익 권위주의 성향 척도를 한국 사정에 맞추어 변화시켜서 '전통적인 부부관계', '강자추종 여부', '여성의 노출', '동성애에 대한 견해', '사회안정에 대한 강조', '혼전성교 허용', '권위에 대한 순응' 등에 대해 응답을 얻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이 변수의 신뢰도는 .48이었다. 알트마이어(Altemeyer, 1981)의 원래 척도의 신뢰도 평균 .88에 비해 낮은 이유는 사용한 아이템 특성에 대한 사전조사가 없이 임의적으로 원래의 34개 문항으로부터 7개의 문항만을 추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변수 역시 정치적 이념과 상관관계가 .21($p < .001$, $n = 600$)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공변타당도가 확인된 것으로 보았다.

3)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9문항을 사용한 보가더스의 사회 거리감 척도를 사용했다. 북한 사람과 만났을 때, "우리집 아이나 동생과 같이 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거리감이 크고, "(미혼이고 애인이 없다면) 연인으로도 삼을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거리감이 적은 것으로 각 응답의 척도값을 부여했다(김혜숙, 1988; 이준웅, 2000). 응답자가 선택한 문항의 척도 값의 합산평균값을 구해서 사회적 거리감 지수로 삼았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이용해서 측정했다.

4) 통일에 대한 해석적 틀

통일에 대한 해석적 틀은 "남북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내담을 가변인으로 코딩해서 구성했다.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 민족 한국가로 살기 위해서'를 선택한 응답자가 48.7%였으며, '단일 경제체제를 이루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기 위해'를

선택한 응답자는 19.2%였다. 또한 '농산수의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사회에 살기 위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0%에 달했다. 따라서 각각의 응답을 '민족단결', '경제이해', '체제통합' 틀로 정의하고 가변인수로 재코딩했다.

5) 종속변수: 통일에 대한 태도와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와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명제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어 측정했다. 두 문항을 이용한 척도의 상관관계는 .64, 신뢰도는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지원, 남북교류, 통일비용 부담의사 등 3가지로 구분해서 측정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식량지원', '경수로지원', '비료지원' 3문항에 대한 동의여부를 측정해서 구했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교류에 대한 의견은 '민간기업의 경제교류', '스포츠교류', '금강산 비롯한 관광교류', '방송교류' 등에 대한 찬반 동의여부를 물어 측정했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비용 부담의사는 '현 정부의 대북지원규모는 국민 1인당 연간 2,450원 정도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금액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보십니까'라고 하는 문항을 이용해서 측정했다.

5. 연구 결과

1) 원칙과 의견의 괴리현상 모형 검증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에이모스(AMOS)를 이용해서 <그림 1>에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해 보았다. 자유도에 따른 모형과 자료의 차이 검증 결과($p=.01$)는 통상적인 기준의 범위에 들지 못했지만, 이 결과

는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적합도 지수(GFI=.986; AGFI=.961; NFI=.962)의 크기를 보면 전체 표본이 자료에 대체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로계수를 보면 모든 계수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수이념은 김대중 대통령 평가, 통일 원칙, 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북한주민에 대한 거리감 역시 통일 원칙과 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권위주의 성향은 통일 원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만,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함축을 갖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평가는 통일 원칙과 대북 정책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이며, 김대중 대통령에 부정적이며,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해 거리감을 느낄수록 남북 교류, 대북지원, 통일비용 부담과 같은 대북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모형이 정치지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낮은 정치 지식과 높은 정치 지식의 조건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보았다. 두 조건 모두 자유도로 보정한 카이제곱의 값($\chi^2/d.f.$)이 2이하였으며, 기타 적합도 지수도 모두 .95 이상이어서 자료에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낮은 정치 지식과 높은 정치 지식의 조건에 따라 각 경로계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았다. 먼저 정치 지식이 낮을 경우, 권위주의와 김대중 평가만이 통일 원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권위주의와 사회거리감이 대북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 이념은 원칙과 정책 모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통일 원칙과 대북 정책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높은 정치 지식 조건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 평가가 통일 원칙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동시에 원칙이 정책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45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정치적 지식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정치 이념, 권위주의 성격, 그리고 사회 거리감이 모두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맺었다.

<표 1>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결과

	전체 표본	저지식 집단	고지식 집단
회귀계수			
보수이념 → 김대중 평가	-.175***	-.203***	-.169***
보수이념 → 통일원칙	-.147***	-.107	-.164***
보수이념 → 대북정책	-.070	-.035	-.111*
권위주의 → 통일원칙	.177***	.207***	.142**
권위주의 → 대북정책	-.240***	-.321***	-.156**
사회거리 → 통일원칙	-.213***	-.069	-.320***
사회거리 → 대북정책	-.255***	-.259***	-.201***
김대중 평가 → 통일원칙	.119**	.159**	.087
김대중 평가 → 대북정책	.185***	.174*	.188***
통일원칙 → 대북정책	.297***	.143	.458***
김대중평가 → y1	1.000a	1.000a	1.000a
통일원칙 → y2	.879a	.964a	.837a
통일원칙 → y3	.726***	.699***	.730***
대북정책 → y4	.798***	.804***	.785***
대북정책 → y5	.732***	.734***	.736***
대북정책 → y6	.472a	.435a	.502a
상관계수			
보수이념 ↔ 권위주의	.210***	.113	.278***
권위주의 ↔ 사회거리	.035	.063	.023
보수이념 ↔ 사회거리	.065	.031	.088
모형 적합도			
$\chi^2/d.f.$: p	2.46; .01	1.31; .17	1.88; .02
GFI	.98	.98	.98
adj GFI	.96	.96	.95
NFI	.96	.94	.95
사례수			
	600	258	342

* p<.05; ** p<.01; *** p<.001; a 고정 파라미터

<표 1>의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 지식의 고저에 따라 독립변수들의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정치 지식과 정치 이념간의 상호작용 효과이다. 높은 지식 집단에서 보수적 이념이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표본보다도 그리고 낮은 지식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다. 하지만 권위주의 성향이 원칙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 크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지식이 많을수록 정치 이념의 역할은 커지는 반면 권위주의 성향과 김대중 평가와 같은 요인의 중요성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정치 지식의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정치이념이 통일 원칙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상의 결과는 정치 지식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치 이념과 권위주의적 성격,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적으로 보아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정치 이념이 원칙과 정책에 미치는 효과가 커지지만, 정치지식이 낮은 집단은 권위주의 성향이 통일 원칙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권위주의 성향과 마찬가지로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 그 효과가 강조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통일 원칙이 정책에 미치는 효과의 경로계수가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45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경로계수가 .14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정치적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 통일 여론의 원칙과 정책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해석적 틀이 원칙과 정책의 괴리에 미치는 영향

원칙과 정책 간의 의견의 괴리를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통일 원칙과 남북교류, 통일 원칙과 북한지원, 그리고 통일 원칙과 통일비용 지불의사 등의 차이를 구해서 종속변수로 삼고 성,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정치이념, 권위주의 성격, 북한주민에 대한 거리감, 김대중 대통령 평가 등을 공변변수로 삼아 그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이에 덧붙

여 정치 지식과 해석적 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공변량분석(ANCOVA)을 이용해 알아보았다.

먼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공변변수 가운데 연령이 원칙과 정책의 괴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북 지원(B=.252)과 통일 비용 지불의사(B=.277)에 있어서 연령이 많을수록 통일 원칙과 정책의 괴리가 컸다. 반면 성교 교육수준은 괴리의 규모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 가운데 권위주의 성향이 원칙과 정책의 괴리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권위주의 성향이 클수록 원칙과 남북교류(B=.464), 대북지원(B=.456), 통일비용 지불의사(B=.262), 등 세 개의 정책관련 변수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치지식과 해석적 틀의 주효과를 보면, 먼저 정치 지식이 발달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원칙과 정책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3, 4>에 제시된 괴리의 평균값이 보여주듯이 남북교류($X_{\text{정치지식}} = 6.39$, $X_{\text{고정치지식}} = 10.19$, $p < .05$), 대북지원($X_{\text{정치지식}} = 22.81$, $X_{\text{고정치지식}} = 26.18$, $p > .05$), 통일비용 지불의사($X_{\text{정치지식}} = 17.93$, $X_{\text{고정치지식}} = 25.21$, $p < .01$) 등, 지식이 높을수록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 지식이 높은 조건에서 신념이나 지식의 변별성이 커지면서, 원칙과 정책의 의견 차이도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연구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해석적 틀이 원칙과 정책의 괴리에 미치는 효과도 확인했다. 남북교류($X_{\text{민족단결}} = 9.69$, $X_{\text{경제이해}} = 2.02$, $X_{\text{체제통합}} = 15.28$, $p < .05$), 대북지원($X_{\text{민족단결}} = 27.1$, $X_{\text{경제이해}} = 16.66$, $X_{\text{체제통합}} = 28.54$, $p < .05$), 통일비용 지불의사($X_{\text{민족단결}} = 25.40$, $X_{\text{경제이해}} = 14.34$, $X_{\text{체제통합}} = 21.46$, $p < .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제적 이해' 해석 틀을 수용할 경우, 원칙과 정책의 괴리가 가장 적어지며, '민족 단결' 또는 '체제 통합' 해석 틀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 괴리가 상대적으로 커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석적 틀과 정치 지식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 결과, 통일 원칙과 남북교류 정책의 괴리 그리고 통일 원칙과 대북 지원 정책의 괴리에서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했다. 또한 통일 비용지불 의지에 대한 상호작용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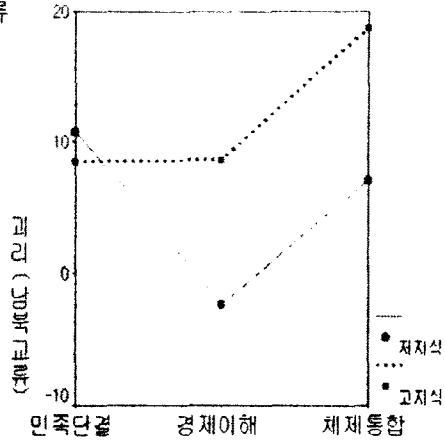
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림 4>에서 보이듯이, 다른 종속변수의 상호작용 패턴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상호작용 패턴을 보면, '경제적 이해득실' 해석적 틀을 지닌 경우, 정치 지식의 고저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통일을 경제적 이해관계로 이해하는 사람의 경우, 정치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원칙과 정책의 괴리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체제 통합'으로 통일을 이해하는 경우, 정치 지식이 많은 조건에서 원칙과 정책의 괴리가 상대적으로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지식이 발전된 경우 통일을 이해하는 해석적 틀의 변화에 따라 통일원칙과는 별도로 남북교류, 대북 지원, 통일 비용지불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반대가 강조되어 나타남을 보여준다. 정치 지식이 발전된 사람들은 해석적 틀을 이용해서 원칙과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화에 성공하고, 그 결과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프레임과 정치지식이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괴리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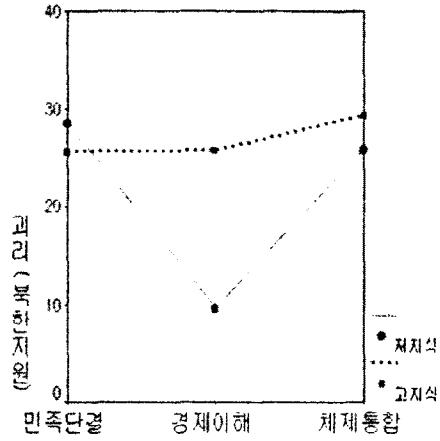
	통일원칙과 남북교류의견 괴리	통일원칙과 북한지원의견 괴리	통일원칙과 통일비용의견 괴리
남성	.237	.478	-.306
연령	.128	.252+	.277*
교육	.016	.083	.514
김대중 평가	-.118*	-.105+	-.038
정치이념	.234*	.070	.098
권위주의	.464***	.456***	.262**
사회거리	.153	.059	-.022
해석적 틀	F(2)=3.329*	F(2)=3.501*	F(2)=5.208**
정치지식	F(1)=0.568*	F(1)=0.497	F(1)=8.015**
해석적 틀 > 정치지식	F(2)=2.764+	F(2)=3.734*	F(2)=1.782
모형	F(12)=4.405***	F(12)=4.336***	F(12)=3.962***
R2	.103	.102	.094

* p<.05; ** p<.01; *** p<.001; a 회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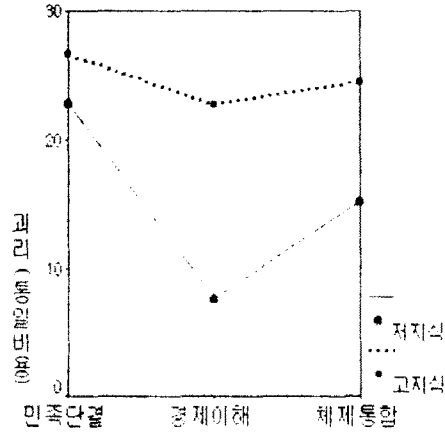
<그림 2> 남북교류



<그림 3> 북한지원



<그림 4> 통일비용



6. 연구 결과의 논의

이 연구는 통일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각본에 들어가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에 대해 지원하며,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현상, 즉 통일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치 지식, 정치 이념, 권위주의 성격, 북한 주민에 대한 거리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통일을 이해하는 해석적 틀을 설명 변수로 삼아, 원칙과 정책에 대한 괴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이념은 통일 원칙과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예상한대로 보수적일수록 통일과 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이념의 영향력은 정치 지식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정치지식이 많은 시민의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영향력의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정치지식이 적은 시민들은 통일 원칙에 대한 이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는 결국 정치적 지식이 발달할수록 정치적 이념의 준거적 기능이 강화되어 작동한다는 기존 연구의 이론적 명제를 경험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Conover & Feldman, 1986; Hamill et al., 1985).

둘째, 권위주의 성격 역시 통일 원칙과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통일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현상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곧 권위주의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는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커진다는 <표 2>의 공변량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 성격이 '사회적 권위나 함의에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자신의 안전에 민감하고'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격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론적 전제에 근거해서 해석할 수

있다(Altemeyer, 1988; Peterson et al., 1993). 즉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통일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다수의 의견에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동시에 남북교류, 대북지원, 그리고 통일비용 지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안전에 불안함을 느끼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성격의 개인차 요인이 통일관련 의견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를 확인한 것이 이 연구의 주요 성과 중의 하나이다.

셋째,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도 효과적인 설명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주민에 대한 호감도 또는 태도의 한 차원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감은 통일 원칙과 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거리감이 통일 원칙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정치 지식이 발달된 경우에 더 크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지식이 발달된 경우에 통일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데 자신의 북한주민에 대한 호감도 또는 태도를 더 잘 통합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스나이더만 등(Sniderman et al., 1991)이 제시했듯이, 정치 지식이 분화되고 통합될수록 정치적 감정이나 태도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인식, 평가, 판단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넷째, 통일을 이해하는 해석적 틀은 통일 원칙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의 차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정치 지식과 상호작용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통일을 '경제적 이해관계'로 이해하는 경우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가장 크며, 반대로 통일을 '민족 단결' 또는 '체제 통합' 등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원칙과 정책에 대한 괴리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또한 정치적 지식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통일을 '경제적 이해관계'로 이해하는 경우 지식이 많을수록 원칙과 정책간의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해석적 틀이란 사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식 구성체의 주제적 또는 내용적 차원이며, 해석적 틀이 질적으로 다를 경우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의견형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Neuman et al., 1993). 결국 이러한 해석적 틀의 역할은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사실상 의견의 불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견이 불일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Sniderman et al., 1991, p. 49).

마지막으로 정치적 의견형성 및 표명에 있어서 정치 지식의 역할이 지대함을 확인했다. 특히 정치 지식은 그 자체로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주로 다른 설명 변수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치적 의견형성 및 표명에 미묘한 효과를 초래한다. <표 1>에 제시된 정치 지식의 고저에 따른 설명변수들의 회귀계수의 규모와 통계적 유의도의 변화 그리고 <표 2>와 <그림 2, 3, 4>에 제시된 해석적 틀과 정치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등은 모두 정치 지식이 정치적 정보처리와 관련해서 기저에 작용하는 효과(pervasiveness)임을 보여준다. 결국 정치 지식의 특성을 중심으로 통일 원칙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정치 지식이 발전한 시민들은 통일 원칙에 대한 의견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분별할 능력이 있으며, 동시에 이렇게 분별된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정치적 이념, 권위주의 성격, 사회적 거리감, 또는 해석적 틀 등을 통해 통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정치 지식이 많은 경우,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시민은 여론의 대세를 따라 남들과 같이 통일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동시에 보수이념에 의존해서 일련의 통일 정책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또한 그가 통일을 경제적 이해관계의 틀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가 더욱 커진다. 반면 정치적 지식은 적은 시민은 전반적으로 통일 원칙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가 적으며 (하지만 원칙과 정책의 상관관계는 낮음), 특히 권위주의적 성격이 아닐수록 이러한 괴리현상을 적게 보인다. 결국 정치적 지식은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양날의 칼처럼 작용한다. 정치적 지식이 많을수록 복잡한 현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정치적 현실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동시에 원칙과 정책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리저리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통일 정책에 대한 여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현상은 정치적 지식과 정치 이념, 권위주의 성격, 북한주민에 대한 거리감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바, 이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 통일 원칙과 정책에 대해 지극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것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과제 혹은 이루어야 할 비원일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서 통일은 막연한 과제 혹은 비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개인적 성격,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 지식에 의해 구성되는 '정치적 판단의 대상'에 가깝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각 개인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는 구성된 정치적 현실이다. 또한 바로 이런 까닭에 통일에 대한 의견이 '통일을 이해하는 해석적 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전혀 놀랍지 않다. 결국 통일에 대한 개인의 의견은 물론 집합적인 여론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 정치적 그리고 개인차 관련 변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통일 여론은 일견 불안정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치적 지식과 통일 의견의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통일 관련 의견의 '불안정성'은 개인의 통일에 대한 의견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방식에 기인하는바, 통일과 관련된 정치적 지식이 발전되어 있을수록 의견을 안정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정치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원칙과 정책에 대한 괴리가 크지만 이 둘간의 상관관계는 높으며(즉 차이가 있으면서 통합성이 높음), 정치 지식의 수준의 낮을수록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는 적지만 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도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차이도 없고 통합성도 낮음). 특히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은 '정치 지식'과 같은 이념적 요인이 통합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

함을 담당하지만,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은 '권위주의 성격'과 같은 개인차 요인이 영향력을 행사함을 확인했다. 결국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의견이 분화되면서도 이념적으로 통합된 의견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통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일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맥과이어(McGuire, 1964)는 일찍이 '문화적으로 진부한 명제(cultural truism)'는 다수 의견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된다면 뜻밖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부한 명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기회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명제에 대해 근거를 따지고 논지를 검토하는 반대 견해가 제시될 경우, 이 '문화적으로 진부한 명제'를 유지하려는 동기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뜻밖에 쉽게 그 명제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의견은 이와 같은 '문화적으로 진부한 명제' 가운데 하나일지 모른다. 예컨대, 통일에 대한 지식이 적은 사람들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며 통일을 누구나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 본적이 없다. 따라서 통일 대한 의견을 강하게 유지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 이 경우 통일에 대한 여론은 외형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동의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절대적인 동의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다수과가 형성된다고 해도 그 의견은 반대의견이나 이견에 대해 취약한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에 근거한 여론이야말로 '불안정'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통일에 대한 정치적 지식이 적을수록 이념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개인차 성격요인에 의해 흔들리는 이른바 불안정한 의견을 보이게 된다. 반대로 통일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는 정치적 세력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폭 넓은 정치적 이념의 스펙트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담론을 접하고, 이러한 담론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한 개인이 지닌

의견은 더욱 역동적이며 통합적일 것이다. 다원적으로 형성된 사회정치적 세력이 제시하는 다양한 메시지에 노출된 의견이야말로 더욱 복잡하게 통합된 의견일 수 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원칙과 의견의 괴리 현상에 대해 염려하면서도 비판적이지만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폭넓은 맥락에서 재구성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통일에 대한 심도있는 전망을 갖춘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통일을 흔히 민족의 비원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아직 통일에 대한 이념적 기초, 의제간의 정치적 우선순위,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까닭은 분단, 한국전쟁, 휴전, 대결적 정권의 강화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경험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의견이 세대간, 지역간, 학력간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두고 이를 단순히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특성으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각 세대, 지역, 계층이 겪은 통일관련 사건의 역사적 경험이 다르며 각 의미화 방식이 다르며 정치적 판단의 규칙도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그 영향력이 확인된 일련의 변수에 대한 설명도 확장된 역사적 지평에서 재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 성격도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해서 어떻게 강화되었거나 약화되었으며, 어떤 공통의 기억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이론화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한 정치적 의견의 형성은 개인적이며, 사회적이며, 동시에 역사적이다. 한 연구에서 모든 차원을 동시에 탐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러한 맥락들의 규정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 참고문헌

- 김혜숙 (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한국심리학회편. 서울: 성원사.

- 이준웅 (2000). 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북한관련 정보추구와 통일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이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에 미치는 영향. 『방송연구』, 겨울호, 223~253.
- 이준웅 (2004). 언론 매체 이용 및 해석적 틀이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48권 1호, 28~56.
- 정기선 (1997).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통일원.
- Adorno, T. W., Frenkel-Brunswi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 Altemeyer, B. (1981). *Right-wing authoritarianism*. Manitoba: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 Altemeyer, B. (1988). *Enemies of freedom: Understanding right-wing authoritarianism*.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ogardus, E. S. (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s. In K. Thomas (ed.), *Attitudes and behavior*. London: Penguin Books.
- Campbell, D. T. (1967). Stereotypes and the perception of group dif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s*, 22, 281~289.
- Conover, P. J., & Feldman, S. (1984). How people organize the political world: A schematic mode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 95~126.
- Conover, P. J., & Feldman, S. (1986). The role of inference in the perception of political candidates. In R. R. Lau & D. O. Sears (Eds.), *Political cognition: The 19th annual Carnegie Symposium on cognition* (pp. 127~15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nverse, 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pp. 206~261). New York: Free Press.
- Converse, P. E., & Marcus, G. (1979). The new CPS panel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 32~49.

- Fiske, S. T., Lau, R. R., & Smith, R. A. (1990). On the varieties and utilities of political expertise. *Social Cognition*, 8(1), 31~48.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McGraw-Hill.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94). Growing up with television: The cultivation perspective. In J. Bryant and D. Zillma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17~4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raber, D. A. (1988). *Processing the news: How people tame the information tide* (2nd ed.). New York: Longman.
- Hamill, R., & Lodge, M. (1986). Cognitive consequences of political sophistication. In R. R. Lau & D. O. Sears (Eds.). *Political cognition: The 19th annual Carnegie symposium on cognition* (pp. 69~9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amill, R., Lodge, M., & Blake, F. (1985). The breadth, depth, and utility of class, partisan, and ideological schemat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850~870.
- Iyengar, S. (1992).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udd, C. M., & Krosnick, J. A. (1989). The structural bases of consistency among political attitudes: Effects of political expertise and attitude importance.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pp. 99~12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Judd, C. M., Milburn, M., & Krosnick, J. (1981). Political involvement and attitude structure in the general public.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660~669.
- Kuklinski, J. H., & Hurley, N. L. (1996). Its a matter of interpretation. In D. C. Mutz, P. M. Sniderman, & R. A. Brody (Eds.). *Political persuasion and attitude change* (pp. 125~144).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au, R. R., & Sears, D. O. (1986). Social cognition and political cognition:

-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 R. R. Lau & D. O. Sears (Eds.). *Political cognition: The 19th annual Carnegie symposium on cognition* (pp. 347~36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Lau, R. R., Smith, R. A., and Fiske, S. T. (1991). Political beliefs, policy interpretations, and political persuasion. *Journal of Politics*, 53, 644~675.
- Lodge, M., & Hamill, R. (1986). A partisan schema for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505~519.
- Luskin, P. C. (1987). Measuring political sophisti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 856~899.
- Maddi, S. R. (1989). *Personality theories: A comparative analysis* (5th ed.). Chicago, IL: Dorsey Press.
- McGuire, W. J. (1964). Inducing resistance to persuasion: Some contemporary approache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 pp. 191~22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Nelson, T. E., & Oxley, Z. M. (1999). Issue framing effects on belief importance and opinion. *The Journal of Politics*, 61(4), 1040~1067.
- Neuman, W. R., Just, M. R., Crigler, A. N. (1992). *Common knowled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ge, B. I., & Shapiro, R. (1992). *The rational public*.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n, Z., and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55~75.
- Peters, J. D. (1995). Historical tensions in the concept of public opinion. In T. L. Glasser & C. T. Salmon (Eds.). *Public opinion and the communication of consent* (pp. 3~32). New York: Guilford
- Peterson, B. E., Doty, R. M., & Winter, D. G. (1993). Authoritarianism and attitudes toward contemporary social iss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19, 174~184.
- Price, V. (1992). *Public opinion*. Newbury Park, CA: Sage.

- Price, V., & Tewksbury, D. (1997). News values and public opinion: A theoretical account of media priming and framing. In G. Barnett & F. J. Boster (Eds.), *Progress in the Communication Sciences* (pp. 173 ~ 212). Greenwich, CT: Ablex.
- Price, V., Tewksbury, D., & Powers, E. (1997). Switching trains of thought: The impact of news frames on readers' cognitive response. *Communication Research*, 24(5), 481~506.
- Ray, J. J. (1973). Conservatism, authoritarianism and related variables: A review and an empirical study. In G. D. Wilson (Ed.), *The psychology of conservatism*. London: Academic Press.
- Ray, J. J. (1990). The old-fashioned personality. *Human Relations*, 43, 997 ~1015.
- Rhee, J. W., & Cappella, J. N. (1997). The role of political sophistication in learning from news: Measuring schema development. *Communication Research*, 24(3), 197~233.
- Shah, Dhavan V., Domke, David, and Wackman, Daniel B. (1996). "To thine own self be true": Values, framing, and voter decision-making strategies. *Communication Research*, 23(5), 509~560.
- Shah, Dhavan V., Domke, David, and Wackman, Daniel B. (1997). Values and the vote: Linking issue interpretations to the process of candidate choic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2), 357~387.
- Sniderman, Paul M., Brody, Richard A., & Tetlock, Philip E. (1991). *Reasoning and choice: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ne, W. F. (1983). Left and right in personality and ideology: An attempt at clarification. *Journal of Mind and Behavior*, 4, 211~220.
- Tetlock, P. E. (1981). Pre to post election shifts in presidential rhetoric: Impression management or cognitive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207~212.
- Tetlock, P. E. (1989). Structure and function in political belief systems.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pp. 129~15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Tetlock, P. E., Hannum, K. A., & Micheletti, P. M. (1984). Stability and change in the complexity of Senatorial debate: Testing the cognitive versus rhetorical style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5), 979~990.

Zaller, J. (1992). *The nature and origin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최초 투고 2004.06.01., 최종원고 제출 2004.07.16)

A Study on the 'Principle-Policy Puzzle' in the Public Opinion of the 'Engagement Policy'

June Woong R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within which whereas the majority of Korean people agree on the principle of the unification policy, the opinions about the concrete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the principle do not converge. To account for this phenomenon, a.k.a. 'the principle-policy puzzle in public opinion', this study constructs and tests a covariance structural model with the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ideology, authoritarian personality, social distance, and the evaluation of the president. In addition, the interaction effects of the interpretive frames regarding the unification policy and political knowledge along with the main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re tested to explain the degree to which people show the gap between the agreements on the unification principle and policy alternatives. A sample of 600 Seoul people are recruited to provide the data for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t was found that the proposed model receives empirical supports from the data. In particular, political knowledge and authoritarian personality play key roles in accounting for the complex process of public opinion in the 'principle-policy puzzle'.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representations of the Engagement policy in the mass media and the public perception of them.

Keywords: the Engagement policy, public opinion, interpretive frames, authoritarian personality.